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박주헌



새로운 정부가 절대적 지지 속에서 탄생했다. 집권 초에 보여주고 있는 파격적이지만 신선한 행보는 앞으로 전개될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에너지정책의 근간은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값싸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 목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신정부의 에너지정책 공약의 핵심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석탄과 원자력의 비중은 낮추는 반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열위에 있지만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믹스 전환과 이에 따른 에너지가격 인상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 변화의 일단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가동 중단을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6월 1일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신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에너지정책 방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매우 미래지향적이다. 기후변화의 위협과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고탄소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원자력을 포기하는 장기적 방향 설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속도의 문제는 남는다. 저탄소, 탈원전이라는 최종 목표는 단숨에 뛰어가는 100미터 경기가 아니라 지구력을 갖고 꾸준히 접근해야 하는 마라톤의 결승선과 같다. 마라톤에서 초반 오버페이스는 자칫 중도 포기로 이어진다. 자신의 몸 상태와 능력을 감안한 최적 속도를 유지할 때 완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저탄소, 탈원전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초반에 너무 먼 거리를 빨리 달릴 수 있는 몸 상태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너무 오랜 기간 고탄소, 원자력 에너지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고탄소, 원자력 덕분에 값싼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에너지비만 증세도 보이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업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가 그것이다. 또한, 석탄과 원자력을 대체할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주변국가와 전력계통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할 여건도 열악하다. 따라서 천연가스 비중 확대는 에너지안보를 취약하게 할 것이며, 간헐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약화해 전력가격을 크게 인상시킬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 앞에 있다.

따라서 저탄소, 탈원전의 대장정에 나서되, 결코 서두르지 말고 대장정을 완주할 수 있는 체질 개선에 먼저 착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비만을 해소해 조금 비싼 에너지에도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에너지가격을 통한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저탄소에너지 비중 확대를 유도하는 가격신호를 보내야 한다. 또한 에너지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 에너지시장 통합에 나설 필요가 있다. 천연가스 도입을 LNG뿐만 아니라 PNG로 다양화하고, 전력계통 연계를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전판을 갖추는 필요도 있다. 이런 제반 여건이 갖추어질 때, 천연가스와 신재생 중심의 저탄소에너지 믹스 목표를 향한 스퍼트가 가능할 것이다.

비록 조바심은 나겠지만 미래에 결국은 다가올 새로운 에너지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체질도 그에 맞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가 바로 새로운 에너지정책일 것이다.